

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선거제’ 큰 산 만났다

민주 “시급” … 한국당 “건성 안돼”…3야 ‘비례제 도입’ 촉구 농성
소소위 심사 마무리 일괄 타결 가능성…세수 부족분 분쟁 여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에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예산 처리 시계제로 상태다. 더욱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조속한 예산안 통과에 힘쓰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선거제 개혁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 예산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야3당의 행보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예산심사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수정 예산안을 도출하기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먼 상황이다. 4조원 세수 부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고, 일자리·남북협력·특수활동비 예산 등 해결해야 할 쟁점 사안도 많다. 무엇보다 여야 대립 속

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충실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정기국회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시라도 빨리 심사를 마무리 짓고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합진규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한국당은 시간에 쫓겨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충 건성건성 할 경우 국민의 고통이 두세배로 늘어난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야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 연계 방침을 분명히 한 점은 예산 정국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야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집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안의 동시 처리를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했다. 나아가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야3당은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긴급 회동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비공식 예산심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예산조정 소(小)소위는 이날 새벽 2시

30분까지 사흘째 회의를 이어가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고, 오후 3시 다시 만나 4조원 세수 부족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이 가동돼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1조 5000억원 감액하면서 예결위 3당 간사 간소소위 활동을 종료했다”며 “재보류 70건(공무원 증원·남북경협 기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가계소득 동향 통계예산·일자리 위원회 등)은 원내대표 테이블에서 논의의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 부족 문제는 여야 충돌 지점으로 여전히 남았다. 한국당은 대규모 세입 결손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소소위 조차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예산 심사 폭거”라고 맞서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룰 전쟁’ 시작

당헌·당규개정특별위 명단 의결…오늘부터 착수

자유한국당이 5일부터 당원권 정치 규정과 전당대회 관련 룰 개정론 본격 착수한다.

4일 한국당에 따르면 전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명단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성원 조직부총장, 김석기 사무부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최교일·김종석·유민봉 의원과 최병길 비대위원, 정기용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5일 오전 9시 첫회의를 열고 당원권 정치와 전당대회에 관련한 주

요 당헌·당규 개정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나 단일지도체제 등 새 지도부의 체제와 선출방식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도당원권이 정치지도로 한 현행 당원권 정치 관련 규정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으로 위원회가 만든 당헌·당규 개정안은 전권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 “내년 의원 세비 인상분 기부”

1명 200만원 … 당론 채택

바른미래당은 4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세비 인상분 약 200만원을 기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금년 대비 1.8% 올랐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세비도 연간 약 200만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정부가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에 제정과 단기 부양책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이 같은 위기상황 속에 공공부문의 건축과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세비 반환을 통해 공공부문의 건축과 개혁을 촉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세비 인상분을 기부할 예정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故 노회찬 의원에 ‘무궁화장’ 추서

훈장·포장 91명 의결

정부가 4일(故) 노회찬 전 정의당 국회의원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전 의원을 포함해 9개 부분 유공자 총 91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세계인권선언(12월 10일)을 기해 고 노회찬 의원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노 전 의원이 인권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고 무궁화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행 상훈법상 정치·경제·사회·교육

·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국민훈장이 주어지며, 무궁화장은 5등급의 국민훈장 중 1등급에 해당한다.

고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도 지난 6월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무궁화장을 선(先) 추서 받은 바 있다.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 7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날 각각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날 훈장·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된 대상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 부문 14명, 평화통일 기반조성 부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권 부의장 등 45명, 대통령령호처 창설 55주년 기념 11명 등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30야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4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연좌농성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참석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정책 기획력 탁월” … 야 “靑 에스맨” 야, 부동산 다운계약서·위장전입 공세

홍남기 부총리 후보 인사청문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홍 후보자를 ‘에스맨’, ‘청와대 바지사장’이라고 비꼬으며 “소신 없이 청와대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기획력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니 말을 잘 듣는 ‘에스맨’인 홍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왜 잘못 됐는지 소신을

갖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시장에서 경제정책이 달라지지 않으면 왜 부총리를 교체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홍 후보자에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는 기대감이 많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홍 후보자는 행정 경험의 폭이 넓고 정책 기획력과 조정 능력이 있다”며 “지난 보수 정부 7년간 추락한 성장 잠재력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상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전력이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만큼 대법관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며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를 끌어내며 대법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 결격사유가 아님을 부각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서면 질의·답변 과정에서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과 1992~2002년 두 차례 다운계약

서 작성을 인정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등록세 의무화 이전이라고 해도 탈세에 해당한다”며 “특히 반포 자이 아파트에 2년 10개월만 거주한 것은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며 “오래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 등은 법률상 문제는 아니고 다만 국민께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입회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062) 362-3336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